

변화와 혁신, 21c 진보를 말한다!

[혁신재창당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와 토론회 토론용 자료]



혁신과 재창당방안 토론자료

2008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

혁신 재창당 방안(토론안)

I. 왜 혁신-재창당이 필요한가

1. 주체적 필요성

1) 10년의 평가와 반성

○ 원내 진출 4년 만에 당은 두 조각이 나고 의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진보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창당 4년 만에 1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일약 한국 정치의 신데렐라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민주노동당이 이제 자신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짧게는 원내 진출 이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당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대선 이후 당의 분열에 대한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승리 21 이후 10년 간의 진보정당운동의 총체적 결과이자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인 것이다.

○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당 활동과 진보운동 전반을 살펴보면서 당의 이념과 노선, 조직 체계, 활동방식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은 없는 지 ‘강령’에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평가와 반성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진보정당운동을 열어가야 한다.

2) 조직의 침체와 이완

○ 대선 패배와 이어진 탈당 사태 이후 지난 총선을 거치며 최악의 위기적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해 있고 당원들은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 당 내에 생산적인 논쟁이 사라졌고, 소수긴 하지만 지금도 탈당하는 당

원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아 있는 다수의 당원들도 당을 방관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과 결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

○ 더구나 진보신당의 탈당 이후 민주노총의 단위 노조 현장에서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향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당의 조직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3) 2개의 진보정당

○ 지난 총선의 결과는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이다. 대선 패배와 분당 사태를 딛고 지역구 2석과 비례 3석을 건진 것은 그 자체로 선전한 것이지만, 의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보다 현저히 약화된 것은 분명한 패배이다.

○ 그런데 이번 총선을 거치며 이 땅에 두 개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진보적 의제와 진보적 활동을 민주노동당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정책이든 조직이든 철저히 경쟁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총선의 결과가 ‘단기적 안도’와 함께 장기적 우려’를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그런데 이러한 경쟁 체제의 일차적 결과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분열의 고착화든 재 통합이든 모든 것은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재도약으로 가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적 질서와 언론의 홀대를 뚫고 정권과 자본 만이 아니라 같은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2. 객관적 필요성

1) 사회적 조건의 변화

○ 지금 한국 사회는 한 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군사독재의 퇴진 이후 민주 대 반 민주 구도가 퇴조하면서 국민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상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비 정규직이나 여성 환경 등 새로운 21세기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 그러나 진보 개혁 세력은 반 신자유주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데도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나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떠안아 기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관성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 특히 민주노동당은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원내에 진출했지만 아마추어적인 원내 활동과 운동권적인 사업방식으로 노동자 서민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역동적인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 정치 지형의 보수화

○ 이명박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보수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화는 일시적인 보수화나 반사적인 보수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바탕으로 보수정당, 보수언론, 보수단체가 함께 하는 범 보수진영의 체계적인 보수화, 조직적인 보수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보수화는 노무현 정권의 퇴장과 386 정치인들의 몰락에 따라 당의 정체성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동반 보수화를 불러와 정치지형 전체를 보수화시켜 보수 양당제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보수양당제가 고착화 되면 정치지형은 보수-중도-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보수 양당제 하에 진보가 구색으로 존재하는 소위 '진보정당 없는 민

주주의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불리한 지형을 뚫고 노동자 서민의 진보정치를 펴 나갈 수 있는 조직적 태세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3) 이명박 정권의 반동화

○ 사회 전반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화두로 '실용'을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본질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자율화계획 발표, 금산분리 완화 추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압박, 민간의료보험 도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반민족적이고 반 민주적이며 친 자본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 시민사회 세력도 예전만큼 위력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급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처럼 이미 범 국민적인 반대투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진보세력에게 '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정세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당 차원의 조직적 태세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Ⅱ . 어떻게 혁신-재창당 할 것인가

1. 새로운 진보 ! 21세기 진보 !

1) 당 활동의 전면 쇄신

○ 민주노동당의 역사와 정신은 계승하고 가치와 원칙은 견지하되, 20세기적 낡은 사고와 관행, 잘못된 사업 방식과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인 평가나 사안별 평가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당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당원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평가'와 함께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21세기 진보의 재구성

○ 다음으로 '진보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관철하고자 했던 기존의 진보적 가치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 하면서, 자주와 평등의 가치에 여성, 환경, 생태, 소수자 등의 21세기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노력을 통해 '낡은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 '20세기 진보'가 아니라 '21세기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의 재구성은 전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의 계급적 토대를 강화시키며 가치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혁신적이며 유능한 진보정당

○ 아울러 '열린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의체계에 대한 부문과 세대의 할당을 확대하고 개방형경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당의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전당대회와 국민정책자문단 등을 통해 정책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중앙과 지역의 모든 사업의 최 우선을 민생정치 활동에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쇠하고 폐쇄적이며 무능한 진보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유능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4) 문화적이며 창조적인 진보정당

○ 마지막으로 무겁고 딱딱한 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전략’을 구사하며 ‘창조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즐겁고 신나는 진보정당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당문화 개선운동을 펼치고, 문화사업단을 설립해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책을 문화활동과 결합시켜 국민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듣는 ‘정치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당원-지역-국민과 함께 !

1) 당원이 앞장서

○ 혁신과 재창당의 주체는 당원이다. 가뜰이나 당원들의 당과의 결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원을 당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면화 해야 한다. 혁신 재창당 안을 만들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분회를 활성화 시켜 당 활동에 당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정치 교육을 통해 당원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2) 지역을 중심으로

○ 당의 중심은 지역이다.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당을 주민 속에 심어갈 수 있는 기제는 지역조직이다. 전 당적인 조직 체계를 광역 시,도당 중심으로 재편하되 지역위원회를 ‘당원관리조직’이 아니라 ‘주민활동조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고, 시,도당 위원장들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민 속으로

○ 대국민 정치활동은 민주노동당의 생존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의의 1번 안건을 정치적 현안문제로 다루고,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당 사업의 최 우선순위를 대 국민정치활동에 두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

여 중앙당은 전 당적인 대 국민 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지역의 조건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며, 지역에서는 매주 하루 ‘주민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여 전 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3. 2010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

1) 도약과 침체의 기로

○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다시금 도약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운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이다. 지방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약진한다면 이어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진보정당의 집권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전면 혁신, 전면 재창당

○ 따라서 2010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은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재창당하는 길 밖에 없다. 2010 지방선거까지 남아 있는 2년간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조직 체계, 사업 방식, 정치 활동 등 당 전반을 정비하면서, 2010년까지의 단계적인 재창당을 통해 2010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3) ‘10-100-1000 프로젝트’

○ 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2010 TF팀’을 구성하고 ‘2010 10-100-1000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즉, 수도권과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후보군 10인을 2008년 말부터 발굴 육성하여 2009년부터 실질적인 후보활동에 돌입하게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군 100인을 2008년 말까지 발굴하여 2009년부터 실질적인 후보활동에 돌입하게 하고, 기초의원 후보군 1000명을 2008년 말까지 발굴하여 2009년부터 실질적인 후보활동에 돌입하게 하는 것이다.

Ⅲ. 무엇을 혁신-재창당 할 것인가

1. 조직 혁신

1. 의결기구

1. 대의원대회

1) 혁신방안

1. 2년에 한 번 선거가 없는 해에 정책당대회를 개최한다.
2. 정책당대회는 당 노선, 중장기적인 사업방향과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심의권과 예산심의권은 중앙위원회로 이관한다.

2) 토론사항

1. 당대회의 성격 및 역할은 무엇인가?
2. 대의원 규모를 현행대로(당권자 60명당 1명) 할 것인가?

※ 쟁점해설

1. 당의 노선, 중장기적인 사업방향과 핵심정책은 전당적으로 토론되고 결의되어야 한다. 당 지도부는 당대회 안건을 2 - 3 개월 전에 공지하여 전 지역에서 당대회의 주요 안건이 충분히 토론되고 결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 대회에는 2-3 일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리하고, 결의하는 축제의 자리가 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당대회를 성사시키려면 1,000 여명 가까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과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현재의 당대회는 개편돼야 한다.

2. 2008년 2월 3일 임시당대회 대의원정수 1332명이다. 당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숫자를 줄이자는 견해도 있으나 정책당대회를 당원 축제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가능하다면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대의원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숫자는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2. 중앙위원회

1) 혁신방안

1. 당연직 중앙위원에 의원단, 시·도당 위원장을 추가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되도록 정원을 축소한다.

2) 토론사항

1. 실질적인 심의, 의결단위인 중앙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 정원을 축소할 경우 선출단위를 시도당으로 조정할 것인가?

※ 쟁점해설

당연직 중앙위원을 확대하고, 사업계획심의의결권과 예결산심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2008년 4월 19일 중앙위원회 현재 정원은 253명이나, 현행대로 당권자 200명당 중앙위원 1명을 선출하고 부문할당까지 포함하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위원의 규모를 200명으로 한정하고 선출단위를 시도당으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중앙위원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지역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있다.

2. 지도체계

1) 혁신방안

1.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도부의 규모를 줄인다.
2. 당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2) 토론사항

1. 최고위원회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2. 정책위원장 혹은 사무총장을 임명직으로 할 것인가? 지도부 중에서 당 대표가 지명할 것인가? 당 대표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할 것인가?
3. 지도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전제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쟁점해설

현재 13명의 최고위원회 제도는 당헌과 당규대로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므로 기동적인 지도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부의 규모를 10인 안쪽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현행의 대표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

원회 제도를 아예 대표 단일지도체제인 대표단으로 전환하자는 견해가 존재한다.

당대표 중심의 통일적인 지도력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위원장의 경우 당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나, 사무총장의 경우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도부 구성에서 노동과 농민할당을 폐지하자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지도부 숫자를 조정하여 여성할당과 노농할당 이외에 다양한 지도부의 구성이 보장된다면 당의 정체성강화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상당한 반론이 존재한다.

시도당위원장이 과거 대표단일지도체제에서는 집행의결기구인 전국집행위원회 성원이었으나 현재는 최고위원회의 자문기구인 확대간부회의의 성원일 뿐이다. 지도체제의 변화에 따라 지도부의 지도력과 충돌하지 않는 전제에서 확대간부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전당적인 실천이 필요한 주요사업계획을 확대간부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여 전당적인 결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있다.

3. 중앙당 집행체계

1) 혁신방안

1.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이 실현되도록 중앙당 집행체계를 전략, 정책, 미디어홍보 중심으로 정예화한다.
2. 각 중 기획단위를 전략기획실(단)으로 통합한다.
3.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정지원단, 의원실 등 당내 정책역량간의 소통과 통일성을 강화한다.
4.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응하는 예비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2) 토론사항

1. 예비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때 부문, 과제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쟁점해설

- 생략 -

4. 지역조직체계 및 운영 방안

1) 혁신방안

1. 지역조직은 정당법에 맞게 광역시도당이 책임지되 지역활동강화방안을 마련한다.

2) 토론사항

1. 정당법이 변화된 조건에서 지역활동을 어떻게 보장, 강화할 것인가?
2. 지역조직의 대주민정치활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3. 지역차원의 당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4. 분회를 존치시킬 것인가? 존치시킨다면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분회의 대안을 찾는다면 어떤 것인가?

※ 쟁점해설

1. 중앙당이 변화된 제도 아래서 활동모형과 모범사례,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특히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분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당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당이 중앙당과 협의하여 인력, 사업,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조직을 보장, 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조직은 지역별 특성(도시형, 농촌형, 공단형)에 맞게 운영하되 대주민정치활동을 중심에 둔다. 구체적인 방안은 사무국장단 회의 - 사무처장단 회의 -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전당적으로 토론하여 결정, 집행한다.

2. 분회의 존속여부, 말단골간조직성 여부, 소모임 분회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논의결과에 따라 당헌, 당규를 정비하고 전 당적인 분회체제를 확립하고, 분회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5. 의원단 활동

1) 혁신방안

1. 의원단은 중앙위원회와 시도부의 방침에 따라 원외 대중투쟁과 원내 의정활동을 통일적으로 결합한다.
2.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과의 전략적 관계를 설정 강화한다.
3. 의원은 조기에 지역구를 선정하고, 지방의원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활동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4. 의원단은 시도부와 정례적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의정지원단을 당

의 통일적인 지도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 토론사항

1. '거대한 소수전략'의 원내외통합활동, '선택과 집중'의 원내 의정활동의 모델과 실제 사례는 어떠한가?

※ 쟁점해설

- 생략

6. 할당제도

1) 혁신방안

1. 다양한 부문과 세대의 할당을 확대하고, 일반당원의 대의기구 참여를 일부 보장하도록 할당제도를 개선한다.

2) 토론사항

1. 노동, 농민 부문의 할당을 조정할 것인가?

2. 다양한 부문과 세대에 할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일반당원의 대의기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위원 혹은 대의원의 일부를 추천에 의해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쟁점해설

1. 현재의 할당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존재하나, 민주노동당과 지지단체와의 올바른 정치적 관계와 발전 경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므로 차기 지도부에서 보다 심층적 준비와 논의 속에 개정안을 마련한다.

2. 현재의 대의제도는 일반 당원의 의견표출의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이다. 반대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결사체간의 경쟁과 투쟁이 격렬해질수록 일반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서 더욱 소외된다. 일반당원을 추천이라는 우연적 요소로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경직된 의사결정구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의원은 1년에 한두 차례, 중앙위원은 두세달에 한번씩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이므로 일반 당원들이 결심하면 감수할 수 있는 부담이다.

추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당원들의 당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반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결사체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정파등록제 보다 추천제가 직접민주주의에 더 부합한다.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의원에 추천되거나, 추천된 대의원이 전문성과 소신이 없이 시류에 휩싸이는 경우

정치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천대의원제도와 당연직 대의원 제도와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의원에 추천된 당원은 일정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대의원대회 참석 등 의무를 해태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7. 당직.공직 선출 방안

1) 혁신방안

1. 당의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성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당원과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민중참여경선제과 개방형경선제를 검토한다.
2. 공직선거에는 지역에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한다.
3. 당직은 진성당원제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일부 당직의 경우 민중참여 경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토론사항

1. 당직의 경우 당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당직과 어떤 시기에 민중참여경선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2. 공직의 개방형경선제를 제도화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 쟁점해설

당직 지도부 선거에 개방형(민중참여형) 경선제를 도입하여 민중과 당과의 정치적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당원 확대를 위한 토대 정치사업화 한다. 공직선거에서 지역의 지지단체와 후원당원, 지지자 등이 당에 결합할 수 있도록 선거인단 방식의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여 당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해 나간다

8. 당원의 정치의식 강화

1) 혁신방안

1. 당직자와 일반당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한다.
2. 강사단, 교육교재, 프로그램 등 통일적인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한다
3.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토론사항

1. 당원의무교육의 도입여부, 실현방법, 의무주체에 대해 논의한다.

※ 쟁점해설

1. 당 내외 역량을 총 망라하여 당원 교육에 진력한다. 당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당 활동에 적극 나서게 하고, 당적 중심성을 갖도록 한다. 21세기의 시대적 조건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당원의무교육은 성평등의무교육의 실시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됐다. 다만 도입 초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의무교육 이행의 의무 주체를 일반 당원이 아닌 시도당으로 정한다. 이후 당원의무교육 이수를 당권자 규정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중앙당은 중앙연수원, 진보정치연구소, 정책위원회와 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연수원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안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단을 발굴한다. 중앙당이 제시한 교육 내용 중 시도당이 예를 들면 연 4시간의 교육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 중앙당은 지역위원장급 이상의 당직자와 단체장급 이상 공직자(후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광역 시도당은 그 외 당직자와 공직자(후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신입당원을 포함한 당원교육은 광역 시도당에서 주관하되 지역위원회를 통해 분회교육, 월레포럼, 당원의 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정치활동 혁신

1) 전략적 지지층 강화

<초점>

- 분당으로 인해 배타적 지지가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농 회원과의 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 여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을 강화한다

<혁신 방안>

1. 3대 경선 프로젝트
 - 2008년 당대표 민중참여경선제
 - 2010년 시도지사후보 주민참여경선제
 - 2012년 대통령후보 국민참여경선제 실시
2. 현장 당원협의회 신설
 - 일정 규모의 당원이 있는 노동 현장
 - 권한과 책임 부여, 재정 지원
3.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전략 마련
 -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단협 효력 확장, 원하청이윤공유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4. 중소기업부문 할당

<쟁점 해설>

1. 2008년 당직 선거 민중경선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 분당 사태 이후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반대가 노골화 되면서 노동자 농민 등 당의 전략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민주노총, 전농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위기를 공세적으로 돌파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긴 하나 당과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농 회원들의 관계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고 또 새 지도부 선출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2) 대국민 정치활동 혁신

- 대 국민정치활동을 당의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모든 주요 회의에서 국민적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며,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대국민 정치활동에 둔다
- 국민적 현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통해 대국민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초점>

<혁신 방안>

1. 모든 회의 안건 1번은 ‘정치 현안’으로 채택
2. 매주 토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날’ 실천
 -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 사업 전개
3. 지역정치활동 체계 정비
 - 후보-주민-당원의 선거 준비체계 마련
 - 지역 주민 조직에 대한 당원 참가 확대
4. 지역정치활동 매뉴얼 개발
 - 공단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5. 민생정치 공동실천
 - 중앙, 지역 차원에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 당-진보연대-민주노총-전농-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3) 의정활동 혁신

<초점>

- 지난 16대 국회의원 활동에서 드러난 의회주의, 합법주의, 개인주의 등 잘못된 의정활동의 모습을 불식시킨다
- 원내활동과 대중운동을 결합시켜 ‘거대한 소수전략’을 추구하되 의정활동

동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 진보적인 지방정치의 모범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당 중심의 통합적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 연간 10대 핵심과제 선정
 - 원내기획실, 정책기획실, 당기획실 등 3원화 된 기획력을 당 기획조정실로 통합
2. 국회의원 중간평가제와 소환제 도입
 - 중앙위원회 산하에 '의정활동 평가위원회' 구성
3. 의정활동과 지역정치 결합
 -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례협의회' 강화
 - 비례의원 담당 지역 선정
4. '예비상임위원회' 설치
 - 원내 의원 5명의 상임위 만이 아니라 전 상임위를 대상으로 구성
5. 전략적 지방정치 거점 선정과 지원
 - 시,도당 차원에서 '예비 상임위원회' 구성
 - 생활의제, 지역의제, 사회의제 등 '의제' 해결 능력 제고
 - 당, 노조 차원의 다양한 지역 개입 전략 구사

<쟁점 해설>

1. '예비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찬성> 원내 의원이 5명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새도우 캐비닛(예비 내각) 형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전직 의원이나 낙선 비례의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 그동안 과제별 상설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집행체계와 중복되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와 같은 문제를 또다시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앙당을 슬림화 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혁신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4) 민생정치 혁신

<초점>

- 비정규직, 교육, 주택, 의료 등 그동안 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전략적 민생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다수의 서민대중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생 과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한다
- 사안별로 일어나는 민생 현안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
- 모든 지역위원회의 활동의 중심을 ‘당원관리’에서 ‘주민사업’으로 전환한다

<혁신 방안>

1. 전략적 민생과제 법제화
 - 1가주 1주택 법제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등
2. ‘민생 SOS 본부’ 설치
 - 학생 폭력, 보험 분쟁, 의료 사고, 사법 피해, 아토피 등 10대 과제
 - 중앙당, 시도당에 모두 설치
 - 지역은 중앙당 10대 과제에 지역 과제 결합
 -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와 결합
 - 민생종합상담실, 민생기동단, 이동 당사 운영
3. 매주 토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날’ 실천
 -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 사업 전개

5) 평화통일전략 혁신

<초점>

- 1회성 교류 사업을 지양하고 통일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통일 시대를 예비하는 교류사업에 집중한다
- 한미동맹 강화를 공공연히 외치며 미사일방어체계(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공연히 외치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며 독자적인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다

- 친북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평화 통일 운동 방안을 개발하고 전형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평화협정 체결 추진
 - 평화협정 체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전 제시
 - 평화협정 시안 마련과 국민적 합의 추진
2. 한미동맹 폐기 추진
 - 침략전쟁 파병 금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동북아 평화지대화 추진
3.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교류와 협력 추진
 - 남북 정당간의 정치 교류 추진
 - 재생에너지 지원, 친환경 농업 협력 등

6) 정책 정당 실현

<초점>

- 중앙당 정책역량은 실질화 하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생산과 정책연대에 주력한다
-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의 통합을 검토한다
-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공부하는 정당의 모범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정책 당대회 개최
 - 2년에 1회, 홀수 년 5월
2. 단일 정책연구단위 구성
 -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 통합 검토

3. '국민정책네트워크' 구축

- 개별 국민, 연구단체, 연구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
-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방식의 온라인 정책제안
- 산하에 '국민정책자문단' 구성
- 각 의제별로 국민의 직접 행동 조직 및 지원

4. '주정야독(晝政夜讀)' 캠페인

- 중앙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린정책포럼 개최
- 매주 토요일 저녁 전 지역위원회 간부 학습의 날
- 지역간부 년 2회 정책 연수 의무화

7) e-Party(전자정당) 구현

<초점>

- 웹 2.0 시대에 걸맞은 정당 시스템을 구축한다
- 온라인으로 당원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의 전형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포털사이트 구축
 - 중앙당 사이트를 온라인 정치 생활 공동체로
2. 매일 아침 '세상을 여는 아침' 발송
 - 메일로 전달되는 일일 당 소식지이자 편지
3. 모바일투표제 도입
- 4.. 온라인 '정책제안방' 개설
- 5.. e-Learning 시스템 구축

8) 당 문화 혁신

<초점>

- '무겁고' '무섭고' '엄숙한' 것이 아니라 '신나고' '즐겁고' '유쾌한' 진보 정당의 문화와 기풍을 진작시킨다

- 다양한 기획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진보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

<혁신 방안>

1. 문화체육사업단 설립
 -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책을 음악, 춤,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
 - 생활체육 활동 강화
2. 문화 프로젝트 추진
 - 일명 '마이클 무어 프로젝트' 추진
3. 정치축제
 - 만민공동회 형식 + 문화적 축제
 - 교육, 물가, 부동산 등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당 사업에 반영

3. 미래 비전 제시

1) 이념과 노선 재정립

<초점>

-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신은 견지하되 이념과 노선을 21세기적 상황과 조건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 사회 변화와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념과 노선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새롭게 보완할 부분을 제시한다
- 애매모호하거나 복합적으로 표현된 강령적 내용들을 보다 명료하게 재정리하고 수정 보완한다

<혁신 방안>

1. 강령 개정 추진
 - 1차 정책당대회에서 추진
 - 당 대회 전에 전 당적 ‘강령토론회’ 진행
2. 국가 비전 제시
 - 민주노동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상
 - 이념적 토대,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사회 체제 구체화

2) 집권전략 제시

<초점>

-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국가의 상과 변혁의 내용을 제시한다
- 집권에 이르는 경로와 방식을 제시한다

<혁신 방안>

1. 집권 전략 제시
 - 집권전략위원회의 기존 안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2. 집권 로드맵 제시

- 2010 지방선거, 2012 총선과 대선 등

3) 재창당 방안 제시

<초점>

- 재창당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 아래로부터의 재창당, 국민과 함께하는 재창당의 원칙을 수립한다

<혁신 방안>

1. 단계적 재창당
 - 1단계 : 2008년 말까지
 - 2단계 :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2. 동시적 재창당
 - 내부 혁신 : 조직 혁신, 정치 활동 혁신, 미래 비전 제시
 - 외연 확대 : 중앙, 지역, 부문 등
3. 아래로부터의 재창당
 - 전 지역위원회 산하에 재창당위원회 구성

4) 21세기 노동전략 마련

<초점>

-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 전략을 구사한다
- 당과 민주노총이 동반하락이 아닌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구사한다
- 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주도적으로 21세기 노동전략을 만들어간다

<혁신 방안>

1.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전략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 집권전략 논의
 - 공동의 계급적 의제와 지역적 의제 발굴
 - 전국적 공동투쟁과 연대투쟁 전략 개발
2.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 전략 마련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단협 효력 확장 / 원하청 이윤 공유제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3. 당-노총 관계 재정립
 - 원내 진출 시기의 당-노총 관계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 영국, 스웨덴 / 브라질, 남아공 등 사례 연구

5) 전방위적 연대전략 구사

<초점>

-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전선 구축과 시민단체와의 사안별 연대, 아나가 국제연대를 추진한다
- 진보대연합의 성과가 재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혁신 방안>

1. 10대 민생의체별 연대기구 구성
2. 기타 사안별 연대기구 구성
3. 국제연대 추진
 - 전직 외교관 등 전문 역량 충원
4. 공동실천, 정책연대, 정책연합, 재창당 등 대상에 따라 연대의 수위 조절

6) 당내 민주주의 실현

<초점>

- 정파적 폐해를 극복하고 당 중심성을 회복한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사, 선거 등에서의 패권주의를 극복해 나간다

<혁신 방안>

1. 개방형경선제 도입
 - 공직은 의무적으로, 당직은 상황에 따라
2. 부문별, 세대별 할당 강화
 - 지역과 부문, 세대를 1:1로 할당
3.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시 추천제 도입
4. 인사위원회 설치

<쟁점 해설>

1. 패권주의에 대하여

그동안 당직 공직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소위 ‘세팅 선거’,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등 당내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양태는 2004년 원내 진출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 후 더 심해졌으며,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번 혁신 재창당 과정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패권주의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도록 해야 한다.

7) 대안적 미디어 전략

<초점>

-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방송, 신문, 출판 등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한다

<혁신 방안>

1. 영상 매체 전략
 - 독자적인 IP TV 개국 추진
2. 가치 '일하는 사람들의 방송국' 설립
 - 당과 배타적 지지단체, 진보적 언론단체가 협의체 구성
 - 100만명 국민청원운동
 - 일단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출발
3. 대중적 진보정론지 발간
 - 주간 진보정치를 대중적 진보정론지로 발전시킴
 - 1단계 : 진보정치와 노동과 세계 통합
 - 2단계 : 대중적 진보정론지 창간
4. 출판 사업
 - 역사 저작물 등

8) 당명 개정 검토

<초점>

- 단기적으로, 최근의 분당 상황에서 기존 당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판단과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 당명의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 중,장기적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을 재정립하며 기존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에 여성, 생태, 환경, 소수자 등 새로운 21세기적 가치를 결합시킬 때 당명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주요 토론주제]

1. 분회의 위상과 골간 조직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

당의 골간 조직은 지역위원회의 분회입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분회모임 자체는 진행되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분회 모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회 모임을 책임지고 조직하는 조직 주체의 문제, 운영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활성화 될 수 없는 분회 조직 자체의 문제인지 논의해 주십시오. 분회 모임이 살아 날 수 있는 방안은? 그리고 주민과 분회조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2. 지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현재 정당법상 지역위원회는 사무실과 상근자를 둘 수 없습니다. 반면 진보정당은 민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지역의 활동을 강조하고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위원회가 정당법상 당원협의회로서 자율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대주민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3. 당원 교육의 필수화와 내용에 대하여

교육은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데 진보적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통한 당원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당원, 일반 당원, 간부 당원 각각에 따른 적당한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4. 주민사업, 지역활동에 대하여

지역에서 당원들이 주민을 만나고 조직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 당이 이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가는데 기본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보수정당들은 동대표, 부녀회 등 자치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런 부분에 매우 열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 환경문제 등 지역 현안에 당과 당원들이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역위와 당원들의 열악한 처지와 조건을 극복하고 주민속으로 들어가 주민을 조직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당이 주도적으로 결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십시오?

5. 대 국민 정치활동에 대하여

진보정치가 사는 길은 유능하고 능력있는 진보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정책정당, 전문성있는 정당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대 국민정치활동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5석의 적은 의석수로 의정활동을 어떠한 자세와 방식으로 해야 하며 사회, 대중운동과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역에서부터 모범을 창출하여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 국민정치활동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지역위와 결합하여 대 국민 정치활동의 주체로 활성화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6. 당 지도부의 체계에 대하여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는 당원 총 투표에 의해 구성되는 13인의 최고위원회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는 보수정당보다 기동성이 더 요구되는 진보정당의 입장에선 당 대표가 시급한 중요 현안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 대표의 권한과 기동성있는 결정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최고위원 수를

축소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단일성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당 지도부의 바람직한 지도 체계에 대하여 토론해 주십시오.

7. 개방형 경선제 도입에 대하여

당원 직선제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에서 소중한 제도로써 앞으로도 당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중적 뿌리가 깊지 못한 당의 처지에서 볼 때 이후 당원이 확대되고 대중적 뿌리가 깊어지는 일정 시점까지 민주노총, 전농 등과 같은 배타적 지지 단체 회원들에게 당직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중참여경선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후보의 경우 당에 우호적인 주민들(시민단체)까지 포괄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의 개방형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한시적으로 민중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것, 일부 공직에 개방형경선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당 활동과 관련 형성된 대 국민 이미지에 대하여

진보정당으로서 신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며 반대로 구태의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볼 때 당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각각의 형성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중 데모당, 운동권당이라는 이미지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이 평화,통일당으로서 긍정적 방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 '부정적 의미의 친북당'으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을 위한 간부 당원 설문조사

- 주관 :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

※ 당의 혁신-재창당 사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5월 9일까지 인트라넷 조직실이나 sentir100@hanmail.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신상

1-1. 당신이(동지께서)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중앙당
- ② 광역시도당
- ③ 지역위원회
- ④ 국회의원실
- ⑤ 기타 (_____)

1-2. 당신의(동지의) 연령은?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이상

1-3. 당신의(동지의) 성별은?

- ① 남성
- ② 여성

(2) 조직혁신 과제

2-1.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 지역위원회)

현재 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지역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당법에 어긋나더라도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상근자를 유지해야 한다.
- ② 다소의 편법이 있더라도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과 상근자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에서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④ 합법정당에 맞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당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위원회는 해당 당부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 ⑤ 기타 (_____)

2-2.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 분회)

현재 당내에는 분회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분회를 중심으로 당 조직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분회는 실패한 모델이기에 폐기하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동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와 같이 지역과 직장을 중심으로 분회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분회활동의 모범과 정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② 분회를 중심으로 당조직을 강화하되, 분회를 다변화(소모임 분회 등), 현실화(30인 규정 완화 등) 하는 등 규모와 사업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③ 당의 골간조직으로 분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며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당원모임을 건설하는 것이 개선방향이다.
- ④ 현재의 당 조건에서 분회나 당원모임 등 당 내부 조직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지역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면 된다.
- ⑤ 기타 (_____)

2-3. (대의기구)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구성(현행, 대의원 2,000명 중앙위원 400명)과 운영방안의 혁신과 관련한 동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① 대의원, 중앙위원 수를 대폭 축소하고 대의원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논의하는 2년 주기의 정책당대회 형태(예산권한 중앙위 이관)로 전환한다.
- ② 대의원, 중앙위원 수는 대폭 축소하되 예결산, 사업계획 심의의결 권한은 현재와 같이 대의원대회에 두어야 한다.
- ③ 대의원, 중앙위원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2년 주기의 정책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 ④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⑤ 기타 (_____)

2-4. (대의기구 : 할당방안)대의원과 중앙위원에 대한 부문할당제도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노동과 농민 할당을 축소 조정하고 각계 각층 다양한 부문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
- ② 노동과 농민 할당을 축소 조정하고 여타 부문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할당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 ③ 노동과 농민 할당은 현재의 규모 범위에서 유지하되 노동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할당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 ④ 현행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⑤ 기타 (_____)

2-5. (지도체계)민주노동당의 지도집행체계는 어떠한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당의 신속한 지도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의 최고위원회와 같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단일성 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② 현재와 같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 ③ 현재와 같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대표-사무총장은 러닝메이트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⑤ 기타 (_____)

2-6. (지도체계 : 선출정수)최고위원회 제도를 유지할 경우 선출정수는 몇 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인
- ② 7인
- ③ 9인
- ④ 13인

⑤ 기타 (_____)

2-7. (지도체계 : 할당방안)현재의 최고위원회는 노동부문과 농민부문에 각 1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① 현재와 같이 노동, 농민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 ② 노동, 농민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되, 민주노총, 전농의 단수 추천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 ③ 노동, 농민 최고위원 할당은 불필요하다.
- ④ 노동, 농민 최고위원 할당제를 폐지하되 대중단체의 지도급 인사가 당의 지도부로 적극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기타 (_____)

2-8. (지도체계 : 확대간부회의)최고위원과 광역시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확대간부회의를 정례화하고 일상적인 당의 사업과 정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② 전당적 실천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확대간부회의에 심의,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③ 당의 최고지도부인 최고위원회와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④ 기타 (_____)

2-9. (당직-공직 선출방안) 당의 각급 선거에 개방형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당원직선을 통해 각급 당직자와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진성당원제의 정신에 반하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
- ② 대통령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와 같이 사안별로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 ③ 모든 공직후보자의 경우 해당 당부가 판단하여 개방형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 ④ 공직후보의 선출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 선거에 개방형경선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 ⑤ 기타 (_____)

2-10. 당의 조직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3) 당 운영과 정치활동 혁신 과제

3-1. (정치활동 혁신)당의 정치활동 혁신을 위한 방편으로 전당적으로 정례화, 제도화된 거점 실천사업(일명, 이동당사 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모르겠다
- ④ 기타 (_____)

3-2. (당원교육)당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당적인 학습, 토론, 교육을 정례화,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모르겠다
- ④ 기타 (_____)

3-3. (당원교육)당원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위해 취해야 할 실현 가능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교육과 장애인교육 등 간부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전당원이 종합적인 의무교육(예,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노동 복지 소수자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②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부의무교육을 종합적인 의무교육으로 확대하되 당직공직후보들만 의무화하고 일반당원들에게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교육과 장애인교육의 당직공직후보자 의무화 교육이면 충분하다.
- ④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당원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성, 창의성에 기초한 당원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환한다.
- ⑤ 기타 (_____)

3-4. (당원참여)당원들의 당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다섯 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 ④
- ⑤

3-5. (의사소통)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가 상호 소통이 부재하다는 문제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다섯 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 ④
- ⑤

3-6. (당내정치)민주노동당은 당내정치는 과열되어 있고 대국민정치는 소홀하게 다룬다는 뼈아픈 질책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3-7. 당의 운영과 정치활동의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4) 미래비전(재창당) 과제

4-1. (국가비전) 민주노동당의 제출해야 할 국가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민주의적 복지정책 + 남미식 혁명적 대중노선의 사회주의적 가치 + 한국적 특수상황의 과제 (자주평화)
- ②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국가
- ③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연방통일국가
- ④ 전면적인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 ⑤ 기타 (_____)

4-2. (재창당) 재창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용가능한 당의 변화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당의 외연확대와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강령과 당명을 포함하여 당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② 당의 강령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령정신 그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③ 필요에 따라 당명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령을 수정하는 것은 당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 ④ 당의 강령과 당명은 민주노동당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 ⑤ 기타 (_____)

4-3. (진보대연합)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보대연합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급하게 진보대연합을 추구하기 본다는 당 조직을 먼저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이다.
- ②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한국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단체를 모아서 진보대연합을 구상하는 것이 당 혁신을 위한 당면 과제이다.
- ③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단체들을 선별하여 당장 실현가능한 진보대연합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 ④ 진보대연합의 내용이 중요하며 기준과 원칙을 우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기타 (_____)

4-4. (가치와 외연의 확대) 당치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와 관련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① 자주와 평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 ② 자주 평등의 의제보다 환경, 생태, 평화, 소수자 의제 등을 더욱 강화하여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 ③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되 환경, 생태, 평화, 소수자 의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 ④ 자주, 평등, 환경, 생태 등의 의제를 동일한 가치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⑤ 기타 (_____)

4-5. (패권주의)패권주의 논란의 중심에는 정파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이념정당에 정파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 ② 설득과 설복이 아니라 특정 정파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인 것은 패권주의이며 지양되어야 한다.
- ③ 패권주의 문제의 본질은 정파문제이다. 불합리한 정파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정파등록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④ 패권주의 논란 자체가 정치공세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성 있는 기구가 조사와 평가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 ⑤ 기타 (_____)

4-6. (진보신당)진보신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위해 과거불문하고 적극 연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 ②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할 수 있으나 정서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
- ③ 진보진영의 분열을 획책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④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부 분열의 조짐으로 인해 곧 소멸할 것이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⑤ 기타 (_____)

4-7. 민주노동당 재창당 사업에 대해 가자고 계신 의견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5-1. (총선평가와 전망) 제18대 총선 결과 민주노동당은 5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당의 전망은 어떠한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까?

- ① 총선에서 선전했고 당의 전망도 밝을 것이다.
- ② 총선에서는 선전했으나 당은 침체와 쇠락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③ 총선에서 부진했으나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 ④ 총선에서 부진했고 당분간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⑤ 기타 (_____)

5-2. (당의 위기 상황 초래의 원인)

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사업 작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섯 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 ④
- ⑤

5-3. (중앙당) 중앙당이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점, 또는 중앙당에 바라는 점을 다섯 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 혁신과 재창당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을 위한 전당원 설문조사

- 주관 : 혁신재창당위원회

※ 당의 혁신-재창당 사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당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은 당의 혁신-재창당 방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참고자료. 혁신 재창당 방안(토론자료)_

1. 동지의 소속 지역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공단형
- ② 농촌형
- ③ 도농복합형
- ④ 도시형
- ⑤ 기타 ()

2. 동지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이상

3. 동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4. 당의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국민 정치활동 강화
- ② 중앙당 대의기구 개편
- ③ 의정활동 혁신
- ④ 지도체계 개편
- ⑤ 기타 ()

5. 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계는 어떠한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⑤ 기타 ()

11. 당의 집권을 위해 당명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당명을 개정해야 한다

② 당명을 개정할 필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